

북핵 해법 충돌…지진 능력 대처 질타 한목소리

새누리 “사드 배치 시급” vs 더민주 “潘 대북 특사 보내자”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도마위…개헌과 “헌법개정 필요” 역설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

20대 국회가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북핵 해법과 경주 지진 능력 대처, 개헌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됐다.

정치 분야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북핵 해법을 놓고 충돌했으며 경주 지진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북핵 해법=새누리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기까지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았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가 ‘말 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리고 말았다. 한 마디로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었다”면서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또 “야당은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과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사드배치 찬반보다 북핵문제를 해소지 못한 현 정부의 ‘무능력’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북한의 흉수피해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북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와 미·북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북 특사를 제안하며 “대통령이 좋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내는 것도 반대치 않겠다”고도 말했다.

◇경주 지진 능력 대처=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미흡한 지진 대응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조기경보 시스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장관은 국민안전처가 ‘국민스팸짜증처’ 또는 ‘국민뒤틀북처’라는 조롱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적 인지와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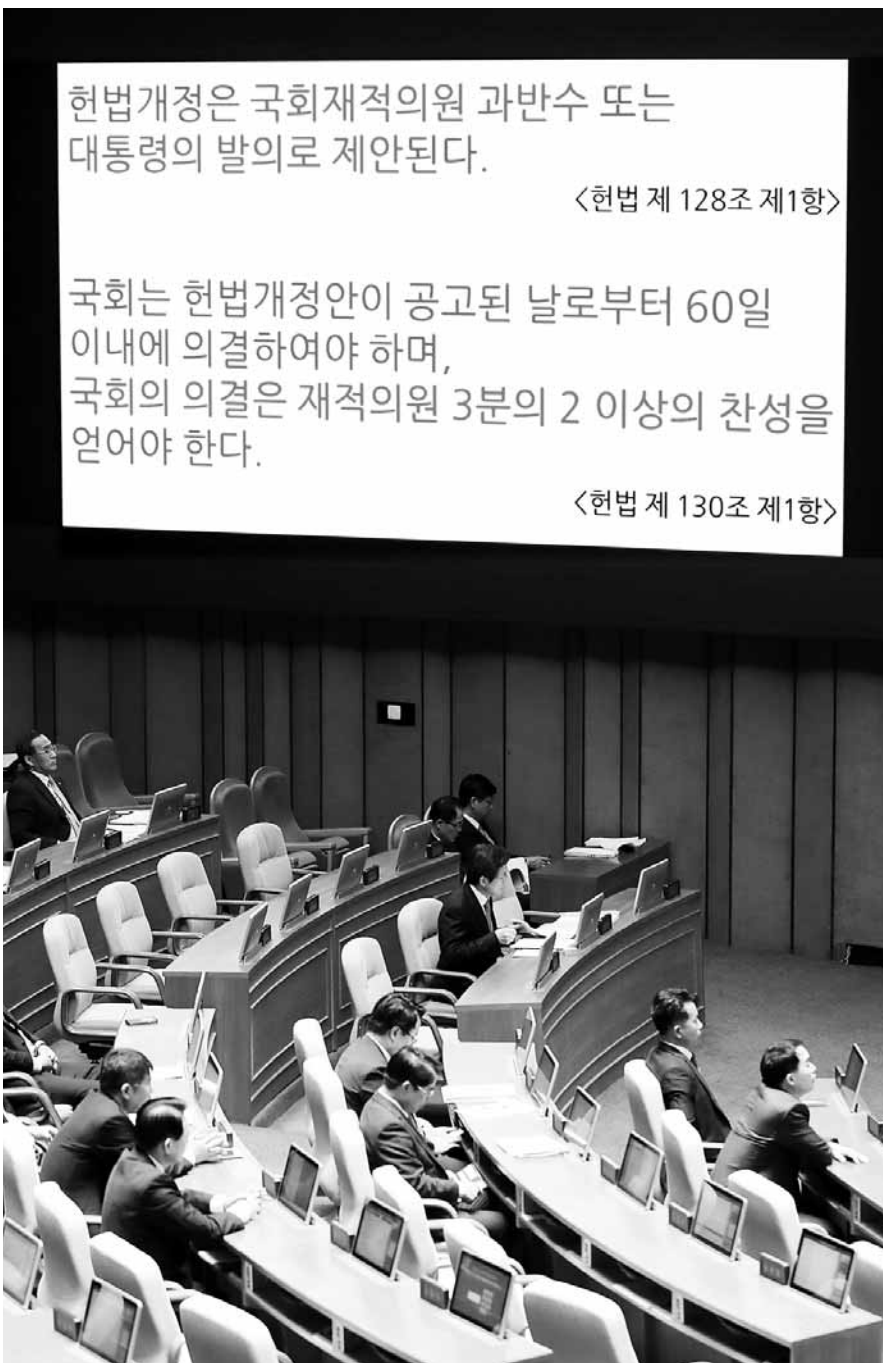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지진 발생시 일본의 경우, 4초에서 20초 내에 국민에게 긴급문자가 발송되고, 미국은 최대 49초를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며 정부의 능력대처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진예측 기술을 향상하고 내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질효성 있는 지진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미리 예보는 못 하더라도 통보는 즉시 함으로써 국민이 더는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의 개헌파 의원들이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질의서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며 “여야적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이는 용의가 있나”라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개헌 논의로 국력 분산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시급한 우리 현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단계에서 검토할 문제”라는 답했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약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개헌론 등장한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도중 개헌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며 개헌관련 헌법 조항을 본회의장 모니터에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 자신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심상정 “북핵 동결 인센티브 제시해야”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심상정 상임대표는 20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최저임금연동제와 초과이익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3대 대입작(great compression) 플랜’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평등 해법은 간단하다.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 올리면 된다”며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대입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심 대표는 북핵 문제와 관련,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핵 동결로,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 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강압이나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리 프로



세스는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 실패할 경우 강경 정책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다자간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략무기 전개라는 파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안보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경주 지진 사태와 관련,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달라”며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 원전안전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심 대표는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과 국회 내 소녀상 건립 등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호남고속철 원안 조속 추진을”

국민의당은 광주 송정~나주~무안 국제공항~목포 구간 노선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고 19일 촉구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공약 이기에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지역공약으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를 약속했다. 이는 정부 최초의 원안이기도 하다.

고 대변인은 지난 2014년 8월20일 광주 송정~목포 구간은 나주와 무안공항

을 모두 경유하는 노선으로 건설키로 전남도 및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당은 수차례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와 목포~제주 구간 해저터널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에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안공항은 서남권 개발과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제주구간 해저터널 개통시 허브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

민주화 영령에도 묵념…최경환 보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율)은 20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한 민주화운동 인사를 추모하기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민주화영령’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



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운동인사들도 마땅히 국민의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2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의 인사 대거 참여 개헌 모임 발족

정의화 전 의장 등 150여명…23일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헌법 개정 논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야 원의 유력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개헌 모임이 발족한다.

이들은 여야 현직 의원 185명이 동참하는 ‘20대 국회 개헌 추진 의원모임’ 등과 공조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개헌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차기 대

선 정국과도 맞물리면서 이들 개헌 모임이 이른바 ‘제3지대’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의 인사 150여 명이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추진회의’(국민추진회의)를 조직하고 오는 2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국민추진회의에는 김원기·임재정·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

인태·조해진·문병호·강승규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등에서 활동한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현 정부 임기 내에서 개헌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개헌 공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순회 토론회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홍보,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오는 23일 창립 기념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주제로 특별 기조강연을 하고, 여야 대선주자들도 초청해 개헌에 대한 견해를 듣기로 했다.

토론에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